

2015 지방9급 행정학 기출

담당 : 방성은교수(일비스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총 평>

-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어 평소 기본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 다만 1번 공유지의 비극에서 무임승차자 문제, 19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의 강제력은 상대성이 있는 문제여서 판단을 신중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행정학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지방직 특성상 6편 지방행정에서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짚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③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설 : 사례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띠는 공유재의 고갈문제를 다룬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 과다소비-자원고갈-공멸)으로서 시장실패 현상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희소한 자원인 공유재에 대하여 각자가 경쟁적으로 과다소비를 함으로써 자원고갈 현상이 초래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다.

- ①(x) : 상대적인 지문이다. 공유재의 속성인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경쟁성 무임승차를 야기하고 경쟁성 무임승차는 과다소비를 초래하므로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의 간접적 원인이 된다. 하지만 무임승차자 문제는 과다소비의 간접적 원인이므로 무임승차자 문제 자체가 시장실패의 주요요인이라기 보기 곤란하다.

②(o) : 공유재는 배제불가능성(비배제성),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o)

④(o) : 과다소비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재화에 대한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예가 거주자주차제, 총액배분자율편성제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39, 40페이지)

답 : ①

2.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 ④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능률성, 책임성 등은 본질적 가치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수단적 가치인 반면 정의, 형평성 등은 행정을 통하여 이루려는 궁극적 가치인 본질적 가치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84페이지) 답 : ④

(2) 행정이념의 구분 - 2015 비타민행정학 84페이지

① 행정이념에 내재하는 가치

- ㉠ 본질적 가치 : 행정을 통해 이루려는 궁극적 가치로서 형평성, 공익성, 사회정의, 자유, 평등 등
- ㉡ 수단적 가치 : 본질적 가치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로서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합리성, 능률성, 합법성, 가외성, 적합성 등

3.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해설 :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을 전제하는 것은 공익관에서 과정설에 해당된다. ①은 과정설에 해당되는 반면, 나머지는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하는 실체설에 해당된다. ②는 주의를 해야 한다. 과정설은 사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이해하는 반면 실체설은 사익의 총합과 공익을 별개로 이해한다. 지문에서는 '개별적 이익을 합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전체이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체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실체설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99페이지) 답 : ①

② 과정설 - 2015 비타민행정학 99페이지

- ㉠ 의의 : 공익은 실체적인 내용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 간의 경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제도□절차적 국면을 거쳐 결과적으로 다수의 이익에 일치되는 공익이 도출된다는 관점이다. 과정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을 통하여 공익화된다는 점에서 다원화된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하며 최근 뉴거버넌스와 부합된다. 소극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소극설이라고도 하며 다원주의, 현실주의, 개인주의 관점이다. □ 슈버트(Schubert), 벤틀리(Bentley), 헤링(Herring), 린드블럼(Lindblom) 등

㉡ 내 용

- ㉠ 사익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선형적 공익을 부정하며 사익을 더 중시한다.
- ㉡ 공익과 사익은 본질적 차이가 아닌 상대적□양적 차이로 보며 사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본다.
- ㉢ 집단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견제와 균형)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므로 현실을 반영하며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여 적법 절차를 강조한다.
- ㉣ 공익결정은 소수 행정인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더 큰 역할을 하므로 민주적이다.
- ㉤ 공익은 단일성이 아니고 복수성을 지닌다.
- ㉥ 투입기능이 활발하고 다원화된 선진국에 적용된다.
- ㉦ 각각의 이익집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특수한 사익이 공익화될 수 있으므로 공익과 사익은 갈등 관계에 있다.
- ㉧ 정책결정론에서 점증모형, 다원론과 맥을 같이 한다.

* 실체설과 과정설 - 2015 비타민행정학 100페이지

③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 redistributive policy) - 2015 비타민행정학 205페이지

㉠ 의의 : 재분배정책은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소득층(가진 자)으로부터 저소득층(못가진 자)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 누진세율, 개별(특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건설, 저소득층 세액감면, 노령연금 등

6.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 신엘리트론의 핵심이론인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은 지배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억압하는 활동으로서 지배엘리트 이익에 편향적인 기득권이익이 보호되므로 가치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2015 비타민행정학 210페이지) 답 : ②

②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 - 2015 비타민행정학 210페이지

㉠ 의 의

㉡ 지배엘리트가 자신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즉, 기존 엘리트세력의 이익옹호나 보호를 하여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함으로써 정치권력이 없는 일반대중이나 약자의 이익과 의견이 무시되고 편익과 특권의 불공정한 배분이 영속화된다는 것이다.

㉢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이 아니며 엘리트이익에 편향적이다. 기득권이익은 보호되며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口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 거대한 철강회사(US steel)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치체제가 공장의 공해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함.

7.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 ② 공식조직에 있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 ③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 ④ 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해설 :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대두된 이론으로서 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 환경유관론(생태론) 등이 해당된다. ①②③은 인간관계론의 내용이다. ④는 거래비용경제학으로서 조직경제학에 포함되는 이론이다. 조직경제학은 거시조직이론으로서 현대조직이론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360, 361) 답 : ④

(2) 신고전적 조직이론 - 2015 비타민행정학 360, 361

㉠ 의의 : 분업과 수직적 계층제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 고전적 조직이론은 20C 초에 노동조합의 저항과 경제대공황 등으로 인한 저생산성 등에 대하여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한계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대두되었다.

② 해당 이론

- ㉠ **인간관계론** : Mayo 등은 호손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고 비공식적 집단, 의사소통, 비경제적 보상 등 조직의 인간화❶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3) **현대적 조직이론 - 2015 비타민행정학 362페이지**

- ① **의의** : 현대적 조직이론은 종전의 고전이론과 신고전이론을 통합하여 조직 전체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하는 이론으로서 주요 변수인 환경의 급속한 변동과 복잡성, 이에 대응하는 동태적 유기체인 조직, 성장을 추구하는 능동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해당 이론

- ㉡ **기타** : 1950년대의 비교조직론, 1960년대의 발전이론, 1970년대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다룬 거시조직이론(구조적 상황이론,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생태학이론 등), 1980년대 조직문화(기업문화, 행정문화)의 연구 및 분석에 중점을 두는 조직문화론이 나타났다.

8.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이란 작업조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과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 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② 업무 평가 하위 10 %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20 %의 급여 삭감 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③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해설 : 사례는 스스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자율적인 업무성취와 내재적 직무동기를 강조하고 Y이론에 토대를 인간관의 내용이다. Y이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가정으로서 일에 대한 능동성을 제시한다. 즉 보통사람은 본성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며 일을 위해 정신적·육체적 노력을 바치는 것을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다.(오석홍) ③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은 Y이론에 토대를 둔 관리전략이다. ①②④는 X이론에 토대를 둔 관리전략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369페이지) 답 : ③

9.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설 : ③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형 위원회로서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며 법적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므로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존재하지만 내부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참모기관적 위원회로서 민간 외부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면 안 되며 내부 공무원도 포함시켜 구성해야 하며 행정위원회일수록 내부 공무원의 역할은 커진다.(2015 비타민행정학 437페이지) 답 : ③

10.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하우스(House)의 경로 - 목표 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해설 : ① 피들러(Fiedler)는 상황론적 접근론인 상황조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피들러(Fiedler)는 상황조건론을 통하여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권력, 과업구조 3가지 상황변수와 LPC(가장 싫어하는 동료) 개념을 연결하여 상황에 맞는 리더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이론은 행태론적 접근론인 Lewin, Lippitt, White의 연구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484, 488 페이지) 답 : ①

11.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 ② 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 - 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 ④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설 : 정부 3.0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정부'로서 개방과 협력, 참여와 공유의 소통 기반 국정운영방식을 모토로 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유연성 · 창의성 · 인간중심 가치를 중시하면서 국민의 수요(need)를 먼저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곧바로 제공하므로 무선인터넷, 스마트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민 개개인 중심의 국가운영을 하게 된다. ③ 정부3.0은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국민 개개인'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2015 비타민행정학 516페이지) 답 : ③

*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 2015 비타민행정학 516페이지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정보공개제 활성화, 정책실명제 내실화 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공공데이터법 제정□시행, 정부의 원천 데이터 개방) : 공공정보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3. 민□관 협치 강화(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구축)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문제해결형 협업체계 구축, 통합정원제 도입) 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영상회의 활성화, 스마트업무 환경 조성(출장형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미래전략 수립, 사회현안의 선제적(先制的) 예측 및 대응,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②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및 확산)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다양한 시민의 개인별□유형별 특성에 맞

	추어 서비스의 선제적 ☐ 능동적 one-stop 제공,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생활 정보서비스 통합창구 마련-건강, 세금, 휴면계좌 찾기 등), 24시 모바일 민원서비스) 8. 창업 및 기업 활동 one-stop 지원 강화<기업지원 전담반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허가전담부서 설치, 기업 옴부즈만 설치>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

*** 정부 1.0, 2.0, 3.0 비교 - 2015 비타민행정학 516페이지**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주도 ☐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 참여	능동적 공개 ☐ 참여,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 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面對面 접촉)	인터넷 (유선 온라인 접촉)	무선인터넷, <u>스마트</u> 모바일 (무선 모바일 접촉)
인터넷 패러다임	Web 1.0	Web 2.0	Web 3.0
정부형태	전통적 정부	전자 정부	유비쿼터스 정부

12.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 ④ 기존 내부 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해설 : 개방형인사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급이나 직위에 외부 민간인에게 공직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외부의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임용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방형인사제도는 전문행정가를 육성하는데 효과적이다.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은 직업공무원제나 계급제와 같은 폐쇄형 인사제도의 내용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571페이지) 답 : ①

* 개방형 인사체제 - 2015 비타민행정학 571페이지

1. 의의 : 개방형 인사체제는 원칙적으로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에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체제이다.
2. 장 점
 - ① 보다 폭넓은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므로 임용기회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적극적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 ② 외부자원의 유입으로 공직의 침체를 방지하며 성과주의적 관리의 발전을 촉진한다.
 - ③ 외부 전문가의 유치로 공직의 전문성 향상과 임무수행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④ 신분보장에 안주하여 복지부동하거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관료행태를 시정하는 데 기여한다.
 - ⑤ 최고관리자가 정치적 측근을 임용하여 조직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최고관리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되고 조직 장악력이 높아진다.

⑥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외부인사가 조직을 장악하므로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를 강화시켜 준다.

3. 단 점

①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개방화조치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해치고 재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② 내부승진 기회를 감소시켜 승진적체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직무나 직위의 폐지는 감원으로 인한 퇴직으로 이어지므로 재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③ 공무원집단의 단체정신에 손상을 줄 수 있다.

④ 외부임용이므로 공직의 안정성□계속성□책임성이 저해되고 전문성이 낮은 선거참모 등이 임용될 경우 오히려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⑤ 내부로부터의 임용보다 외부로부터의 임용이 임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임용결정에서 실책을 범할 위험부담도 크다.

⑥ 임용권자가 공직 외부에서 선거참모, 대학후배 등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을 임용하므로 자의적 정실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⑦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임무수행이 좌절 또는 교란될 위험이 있다.

⑧ 민간전문가가 공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해야 할 직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 조직 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⑨ 개방직과 비개방직을 구별하여 양자의 인사원칙을 달리한다면 인사제도가 이원화되고 그것은 임용관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

13.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해설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즉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2015 비타민행정학 578페이지) 답 : ②

* 소청심사와 고충심사 - 2015 비타민행정학 578페이지

구 분	소청심사(1963년 도입)	고충심사(1981년 도입)
유사점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식적 제도	
법령근거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 상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나 부작위(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서 범위 좁음)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범위 넓음)
내 용	법원을 대신하여 위 처분의 위법여부, 즉 적법성 (適法性)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 ※ 불만이나 부당한 사항은 심사대상 제외	위 직무조건과 신상문제에 대한 부당 또는 불만 사항을 판단하여 시정해주는 정부의 배려적인 인적자원관리 기능
청 구	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청구가능	추상적□심리적 상태의 불만으로도 청구가능
청구기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정 없음
기 관	소청심사위원회(높은 독립성 요구)	고충심사위원회(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성 요구)
결 정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
결정기한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법적 구속력	강함(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약함(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4.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 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 ③ 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해설 : ①, ②, ③은 교육훈련을 받는 대상자(공무원)가 저항하는 사유이므로 대상자가 저항주체인 반면,
④는 교육훈련자의 소속기관이 저항하는 사유이므로 소속기관이 저항주체이다. 답 : ④

15.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해설 : ④만 옳고 나머지는 옳지 않다.

- ①(x) :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 ②(x) :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한정성의 원칙(목적의
사용 금지, 초과지출 금지, 연도경과 금지)'이다.
- ③(x) :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이다.
- ④(o) :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을 특정 목적에 바로 지출하므로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며 일반회계예산
과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하므로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726, 727페이지)

답 : ④

*** 예산의 원칙과 예외 - 2015 비타민행정학 726, 727페이지**

전통적 예산원칙(통제성 - 입법부 우위)			현대적 예산원칙 (신축성 - 행정부 우위)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에게 공개	신임예산	· 계획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	총액예산	· 책임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예산 = 결산(수지균형)	적자예산, 흑자예산, 조상충용	· 보고의 원칙 (각종 보고에 기초)
명세성의 원칙	구체적으로 항목화	총액예산	· 적절한 수단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모두 예산에 계상 (포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순계예산, 기금, 세입세출 외, 수입대체경비 □ 수입금마련지출	· 다원적 절차의 원칙(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절차를 다르게 운영)
통일성의 원칙	국고로 통합, 국고에서 지출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등), 수입대체경비 □ 수입금마련지출	· 재량의 원칙
사전의결의 원칙	의회가 사전 심의 및 의결	준예산, 예비비, 전용, 사고이월, 재정상 긴급명령(대통령), 선결처분 (자치단체장), 수입대체경비 □ 수입금 마련지출	· 시기신축성의 원칙 ·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상호협력)
한정성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질적 한정성)	이용, 전용	
	초과지출 금지(양적 한정성)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연도경과 금지(시간적 한정성)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및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 조상충용	
단일성의 원칙	재정활동을 단일예산으로 편성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공기업 예산	

16.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 ②만 옳고 나머지는 옳지 않다.

①(x)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2016년 기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015년 기준 110일 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o)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전체 재정규모, 분야별 부처별 예산규모 등 중요 정보를 편성 기간 중에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자원배분계획을 정부 두상구조의 회의체(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므로 예산규모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③(x) : 배정과 재배정 제도는 신축성 제도가 아니라 통제 제도이다.

④(o) : 우리나라는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이 아닌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답 : ②

17.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티부(Tiebout) 모형 을 지지 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접촉 기회 증대

- ① $\neg$, $\sqsubset$
② $\neg$, $\sqcup$
③ $\sqsubset$, $\sqsubset$
④ $\sqsubset$, $\sqcup$

해설 : ㄱ, ㄹ은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인 반면 ㄴ, ㄷ는 대규모(국가나 광역) 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이다.

7. 티부(Tiebout) 모형은 주민들이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를 하므로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주민선호를 충족 시키고자 한다는 모형으로서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이다.

나.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은 공공재 성격상 시민들의 선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공공재 공급에 관하여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모형으로서 국가에 의한 행정을 지지하는 논리이다.

다.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소규모 자치단위에서는 곤란하며 대규모 행정구역(광역행정이나 국가행정)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는 국가에 의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수단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의한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 수단이다.

ㄷ. 지역이 좁을수록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접촉 기회가 증대되며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용이하다.

답 : ②

18.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해설 : ④는 주의를 해야 하는 상대적인 지문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조조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행정협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자치단체장은 그 협의·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속력은 있으나 이행의무가 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고 직무이행명령·대집행권 규정이 없으며 국가도 분쟁당사자이므로 실질적인 구속력은 약하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이나 상급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할 없다는 점에서 강제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제도에 비하여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2015 비타민행정학 879, 880페이지) 답 : ④

* 분쟁조정 - 2015 비타민행정학 880페이지

구 분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국가-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조정	· 감독기관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 분쟁조정위원회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정자치부장관 소속) ① 시도 간 분쟁 ②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간 분쟁 ③ 시도와 시군구 간 분쟁 ④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분쟁 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분쟁 ⑥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소속) : 동일 시도내 시군구 간 분쟁	·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법 개정(2011 시행) - 임의기구에서 강제기구로 변경 - 시행령상 기구에서 법상 기구로 격상
결정기관	감독기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시기	당사자의 신청(일방 또는 쌍방) 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일방 또는 쌍방)
구속력	· 법적 구속력 있음 · 실질적 구속력 강화(· 직무이행명령·대집행권 규정, 이행의무가 법률에 규정)	· 법적 구속력 있음 · 실질적 구속력 약화(· 직무이행명령·대집행권 규정, 이행의무가 시행령에 규정, 국가도 분쟁당사자)

19.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해설 : ③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발매금 총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종전 지방세인 경주·마권세가 전환된 세목이며 개별소비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 아니다. 참고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담배부와 개별소비세의 20%가 2015년부터 지방교부세의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2015 비타민행정학 971페이지) 답 : ③

20.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설 : ①만 옳고 나머지는 옳지 않다.

①(o) :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은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직무감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x) :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는 행정우위의 체제가 확립되므로 행정의 외부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x)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x) :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이 곤란하며 야당일 경우 정권교체를 위하여 현 행정부 실책에 대한 비판과 통제의 강도가 커진다.

답 : ①

⑤ 감사원의 기능 - 2015 비타민행정학 834페이지

㉠ 결산의 확인 : 국회에 제출하는 세출□세입 결산을 매년 사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 회계검사 : 정부 각 기관과 관련기관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한다.

㉢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회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단체 등의 회계

㉣ 선택적 검사사항 :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

㉤ 직무감찰 : 공무원의 비위를 시정□방지하고 행정운영의 개선사항에 기여하는 통제수단으로서, 공무원의 비위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또는 행정관리의 문제점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비교

구 분	회계검사	직무감찰
헌법상의 지위	대부분 헌법기관(영미는 제외)	대부분 비헌법기관
독립성	강함	약함
대상기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타 예산지원기관	행정부 중심(입법부, 사법부 등은 제외)
감사내용	합법성에 치중하는 소극적 감사	공무원 비위 적발, 적극적인 행정조치 강구, 행정운용의 개선향상에 기여